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행정규칙명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고시				
구분전	제정 ☒		개정		현행
형식	고시 ☒	훈령	예규	규정	지침
관련 법령명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서	실국명	산업자원안보실 산업공급망정책관			
	사업부서	부서명(과명)		화학산업과	
		담당자 직·급 성명/ 전화번호		이효은 사무관 / 044-203-4937	
입법일정(예정) ※제·개정 의 경우 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일간)		
	※입법예고	2026. 6. 24.부터 2026. 7. 13.까지 (20일간)(예정)			
첨부자료	필수자료	1. 행정규칙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2. 행정규칙 제개정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3.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기타자료	4. 행정규칙 조항별 상위법령 관련규정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사무관	이효은	044-203-4937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준수

문1.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입니까?

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 작성사항 ※ 해당없음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 · 타당성

<참고자료>

1	
2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 작성사항 ※ 해당없음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참고자료>

1	
2	

문3.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없음 ② 있음

▶ 작성사항 ※ 해당없음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문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 절차 등이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고 확정적인 등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구체적.객관적(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

▶ 작성사항 ※ 해당없음

<표2-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재량권 통제장치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사유

<참고자료>

1	
2	

▶ 작성사항 ※ 해당없음

<표3-1> 업무흐름도(workflow)

문7.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 수렴 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습니까?

① 있음(이해관계자 대표성 확보) ② 없음

▶ 작성사항

<표3-2> 의견수렴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여부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참여기회보장 제도가 없는 이유

	고시제정안 화학산업협회 의견 수렴 ('26.4.30~5.11)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 예정 ('26.6.24~7.5)

<참고자료>

1	
2	

문8.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작성사항

<표3-3>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는 이유

	고시제정안 화학산업협회 의견 수렴 ('26.4.30~5.11)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 예정 ('26.6.24~7.5)

<참고자료>

1	
2	

문9.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 작성사항 ※ 해당없음

<표3-4>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부패통제

문10.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작성사항 ※ 해당없음

<표4-1> 이해충돌가능성

번호	근거규정	내용

<추가설명> 별도의 이해충돌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11.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등 내부 부패통제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① 필요성 있음 ② 필요성 없음

▶ 작성사항

<표4-2> 관련 부패사례 및 부패통제장치

번호	부패사례	관련규정	부패통제장치 마련여부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12.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작성사항

<표4-3> 소극행정 유발 규정

번호	관련 법령	근거 부재 여부	부작위 유발 여부	직무태만 유발 여부

<추가설명>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재정 손실 발생 가능 사유

<참고자료>

1	
2	

[붙임3]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기준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해당여부(O/X)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해당없음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해당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행정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의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O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O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부패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해당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x
	소극행정부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x